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살리기 법정부 차원 신속한 지원 필요”

광주시·금융계·기관·협력업체 간담회서 대책 논의 금융 지원 기준 완화·대출 지원 기간 확대 등 요청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협력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추가대출 실행을 위한 금융지원 기준 완화와 대출지원기간 확대 등은 지역 내 역량이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법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일 시청 충무시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계와 기업 지원기관들과 함께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지역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력업체 대표단, 한국은행·기업은행·광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등 금융권, 광

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광주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광주상공회의소·광주테크노파크·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 등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력업체 대표단은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추가대출 실행을 위한 금융지원 기준 완화, 대출 지원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날부터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세금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정책자금 만기 연장,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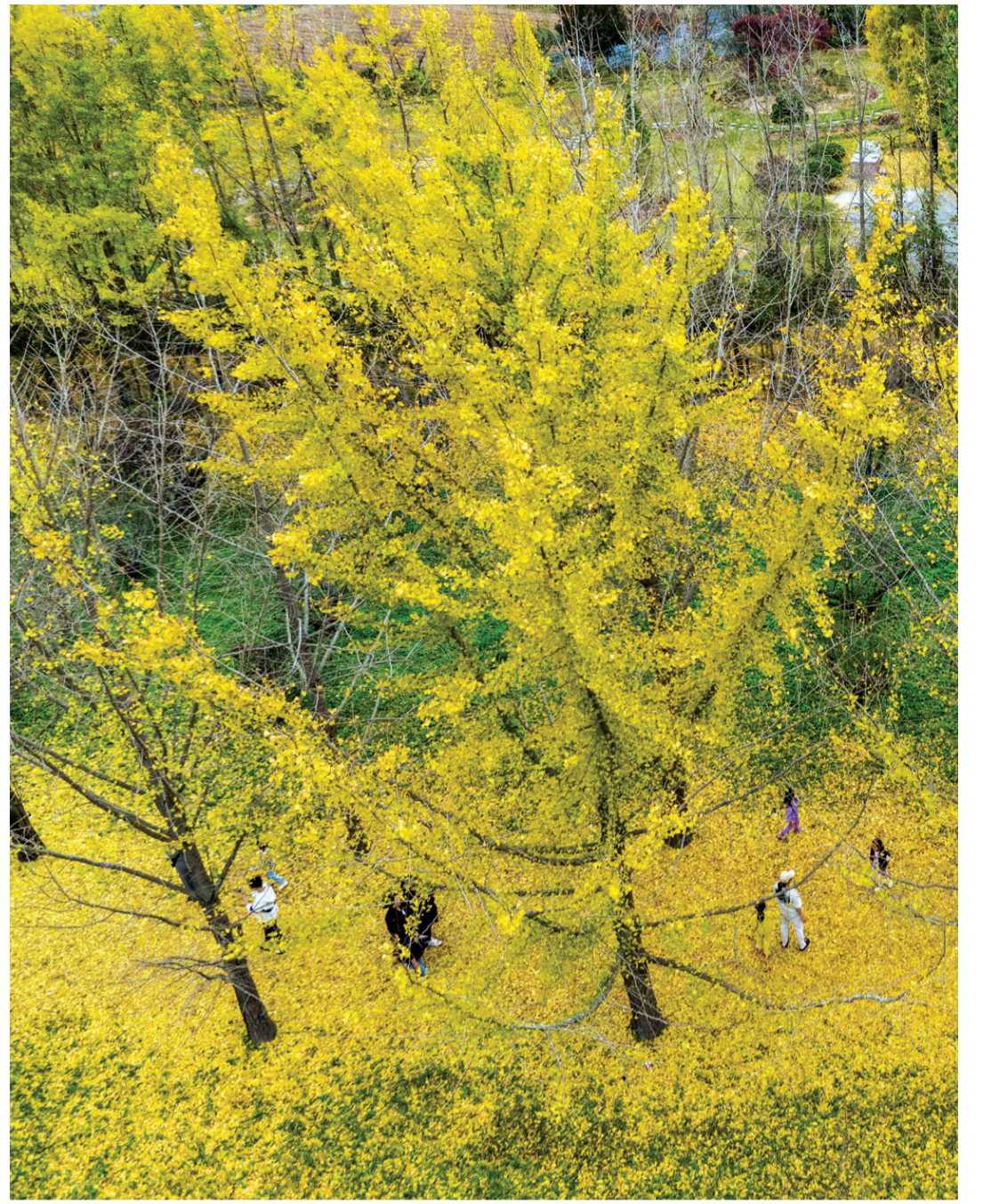
금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오는 9일부터는 100억원 규모 특례 보증을 시작하고 경영안정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시는 또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중소벤처기업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산업통상자원부), 고용위기 지역(고용노동부)으로 지정되도록 신청하고 실사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 회의에 참석해 정부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융권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하려 해도 여러 제도적, 절차적 문제 등이 걸림돌이 돼 지역 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정부 여당과 중소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란 가을 속으로 11월 첫 주말인 5일 나주 남평 은행나무 수목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노란 은행잎 사이로 거닐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 ‘높고’ 급식시설 개선 ‘저조’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감사

중·고 ‘기간제’ 채용 30%대 학교 놀이·체육시설 일부 안전인증 제품 사용 안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 문제와 초등학교 설치 놀이시설·체육시설 관리부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초·중·고의 급식시설 개선사업 실적도 저조한 점도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심장욱(민주·북구5) 의원은 지난 3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아 여러가지 폐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기간제교사 채용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35.8%, 고등학교는 36.4%에 이르며 특히 정원 대비 채용 비율이 절반을 넘는 학교는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10개교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 학교는 교사 정원 49명 중 기간제 교사가 무려 29명으로 59.2%에 달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심철의(민주·서구4) 의원도 “기간제 교사 내부에서 일정 부분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발해 운용하게 돼 있다”며 “사학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립학교가 정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율(민주·남구3) 의원은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체육시설은 반드시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확인 불가’ 제품들이 무더기였으며, 초등학교조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임석(민주·남구1) 의원은 “지난해 급식시설 개선 실적을 살펴보면 개선 대상 320개교 중 10개교

밖에 되지 않아 개선율이 3.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환기시설 개선 학교가 62개교인데, 7개교만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중고가 낮거나 공간 확보가 어려운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 광주에 맞는 환기시설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

광주시, 2023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기관장 현장 참여·재해위험시설 첨단장비 사용 등 높은 평가

광주시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지자체 평가에서 안전점검 실효성, 문화유산 추진 실적 등 5개 항목에 대한 성과 평가와 중앙평가단의 기관장 인터뷰, 심층 점검, 사·도 추진결과 발표 등을 종합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시장 등 기관장의 현장 참여 및 회의 주재 등 높은 관심도, 시민단체·유관 기관과 적극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협업도,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드론·광섬유 등 첨단장비 사용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총 61일간 공무원,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총 327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사고위험시설 등 총 830개소를 점검했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광주시민과 기관, 단체·협회 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해 이룬 성과”라며 “다만 여전히 시민의 일상 속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더 꼼꼼히 살피고 안전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최대 100만원·무료 법률상담도

전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강동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 사기 기본법 및 중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은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피해자(피해자 등 포함)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이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의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세사기가 걱정되는 도민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최대 30만원이 지원되며 주소지 관할 사·군 건축부서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원 신청해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피해자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매 대항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대행) ▲금융지원(저리 전세대출 등) ▲간담복지 대상자 안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 바란다”며 “피해자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해 빠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총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 중 103명이 피해자로 확정되고 40건은 조사중, 29건은 불인정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등 관련 세부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부서자료실(건축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2023. 11.17.(금) ~ 19.(일) (3일간)
삼향읍 남악중앙공원 일원

무안군